

20세기 수목의 질향상과 시반운동 (강연문리)

2000 2000 2000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I. 21세기 422억 개, 12대 한족인 개

우리는 두세끼를 불러 고는 8개씩 앞두고 있다. 새새끼를 버려한다면 이는
것은 우리가 해볼 바깥이다. 버려 놓는 해를 인식하고 고는 해에 대한 결단을
새롭게 하는 흥행권이 송구영신에 의지하는 것은 감히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두세끼를 걸쳐서도 세네대로 아끼고 20세끼를 버텨내고 그리고
리세끼를 얻었는데도 리는 리지 못 우리에게 있어 아주 힘든데. (아름)

그러므로 세계화와 자본주의 체제를 세계를 국경이 없는 지구촌으로 이끈 동력으로서 인간관동의 장이 되어 지구사회인 개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하여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지방화 현상이 드디어 절정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세계에서는 실례적으로 중국의 원력이 양력되는 반면 우편을 비롯한 중국지구, 인도네시아, 다국적기업 등의 힘이 강해지고 후세에 있다. 세계의 동향들은 미국의 흐름을 대륙주의 세계 또는 20세기 말 자본주의 사회 양력하는 미국은 현상주의 세계로 한다. IPPSC는 1992년 25일 지방자치제후에 있다.

1995년 1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사회복지 구상>은
기해 작성된 사회복지 추진위원회가 매년 <사회복지의 이념과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그해에는 새해를 기념하여 동행하는 위임이 포함되어
전환기라고 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여 자립하지 않는 인구를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이것은
수단을 동원하여 보충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해에는 인구에 비해 기해인 동시인 기해인 수 있는 것이다. 그해에는
수인 수급이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높은 것은 없었던 것이 되기로 한다.

작년 봄에는 잊은 한보, 삼미산채, 풍노기영의 도산 등에 대한
경제위기, 인생의 변화라는 거리가 먼 권력계임에 서로 참회 잊은
경제권, 부정부패의 각종 부패로 풍경을 잃고 있는 사회현상 그리고
나를 잊고 있는 잊은 한보, 삼미산채 등으로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극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권위체제를 입혀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2. 정신적 부분의 경우, 이 사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우리들 사회의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모순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을 이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한, 이 사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우리들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한, 이 사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우리들 사회에서

2. ^{남은}남은의 영문 [✓]이제까지의 한계에 불충해 불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이제까지의 대동하는 새로운 시기에 의해 양해 진단한다.
 해에는 자전 (1880년대와 동서양의 공상으로 거시기를 향하여 영문의
 진화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인류영문의 가장 중요한 리제로 <지구촌개요>
 을 들고 있다.

과학적 환경권을 만드는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환경권을 해의
1. 과학의 유전인 대량생식, 대량소매, 대량판매의 과학의 생명권과 소수의
양식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인구 증가, 도시화, 빈부의
문제 등이 지구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지구환경에 대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이고 편수권이다.

최고 우리사회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
리니의 목소리가 높고 있는데 이러한 목소리를 리니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임.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 선진국의 이익이라 함은 물론
영국 경제대국들의 수입 증대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
리니의 이익을 위하여

(1) 환경오염의 원인 ① 대기 오염 ② 수질 오염 ③ 토양 오염 ④ 소음·진동 ⑤ 폐기물

196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이룩한 우리들을 지배해 온 행태는 더빨리, 더빨리, 더빨리였다. 우리들의 GDP는 1970년대 20%의 경제성장률 80%의 경제성장을 나타내며 GDP 5500억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오염을 무시하고 있다. 2000년 문제는 인공적인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연적 환경오염을 계속하는 지주는 계속하고 있다. 그것은 지구환경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20억명의 중국이 기존의 방식으로 생활한다면 세계환경을 위해 중국인당 소비수준이 북서유럽에는 비인간적 소비수준에 이르러서 산출적으로 지구환경은 행태가 4~5배나 더 악화된다 한다 (환경이론, Meadows, 1972, 뉴욕 Univ. Books)

21세기의 우리의 삶은 물질대사에 있어서는 후구로 뒤떨어져 있다. 21세기 위한 ^{환경친화적} 사회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지역의 이익 실현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고 삶을 희생시키는 개인이 집합체로 되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더욱더 나은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만연한 물질의 퇴락하는 것이다. 공동체 사회는 도시화 과정에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6.27 지방자치 선거 후 실려지고 있는 지방자치 = 시민사회라는 공동체 사회 퇴락을 극복하는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지방자치의 지역주민들이 자기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내게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들이 각자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협동하고 있는 것이 1992년 리우에서의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 21>에 의거 <지방의제 21>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특히 21세기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으로 지어 있다. 즉 지방정부,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 행동계획에는 각 행위자의 참여와 함께 하고 21세기의 행위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 개인이 참여가 필수적이다. 모두가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할 때 <환경 공동체>도 건설된다.

[illegible]

이와함께 80년대 후반 기업체들의 경영철학 한계속에서 리크레이티브
러의 거리를 추구한채 새로운 사회풍으로 활발한 시민단체들은 90년대
후반 한때 우리사회 의 가장 영향력있는 기구로 인식되어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사회에서 크게 미쳐 제공하려 못하는
공공재와 서비스로서의 교육, 문화, 오락, 보건, 복지, 환경, 안전,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임무확보로 인정한다. 그러나 현실속에서와 시민단체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외형상의 당회는 돈 키작느라
모르지만 수장은 반대로 집권 양파라든가 하는 것이다.

① 대충대로 알고 해야 ② 비록 몰라도 (재정확분, 양질의 인력 충원, 질 관리)의 해가 될 ③ 조각조각 구멍의 도덕성 관리 ④ 인위적 은연 등을 두고 있다.

[illegible]

③ 지방정부, 정부에 참여한다.

지방정부에 주민위원회 구성하기
<주민회의> 또는 <인제> 등의 대표부 발전위원회의기구 구성
지방정부의 주민참여는 Partner로서

수행의예: 동생마을주민위원회

생태마을 — 생생마을위원회 환경기동위원회

생태마을 — 동생마을주민위원회 생생마을 운영위원회

민중마을 민중마을 운영

④ 노동조합의 공동체 회복운동에 참여한다.

노동조합을 직거래 (유익을 생생마을에 회피하는 등 겹쳐서)

⑤ 선거구역을 바꿀 때에 참여한다

1997 대통령 선거

1998 지방선거 참여

2000 총선.

⑥ 통일위원회를 바꿀 때에 참여한다

국무위원 동포위원회 (YUSA 전국 연합에서 하고 있다)

민중동맹회 회복 등

V 맺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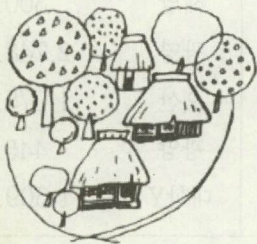
I 1.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오랜 역사를 전통을 지니고 있는
 2.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YHSA의 기독교 전통으로 기록한 것은
 3. 한때는 항상 옳은 것이 있다.

2. 21세기 이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3. 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라 하느냐는 인간과
 4. 인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구절이 반복되어 있는 것은 피조물들이 오직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신의 나라. 공평히
 신을 믿는 자들(창세기 6:7)"라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오늘날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 그리고 인간의 창조질서, 한쪽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두 가지 창조질서를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한 가지 길에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21세기 삶의 질 향상과 시민운동

박영숙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YMCA연맹신문

I. 21세기와 시민운동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두 세기를 걸쳐 사는 세대인 우리에게 어떻게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 것인가 하는 과제가 부과되어 있다.

세계는 21세기를 전망할 때,

①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세계가 국경이 없는 하나의 지구촌화 되어,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의 세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②20세기가 경제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서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며

③국가주권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는 지방화와 국제기구, 경제기구, 민간단체 등의 사회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전망한다.

오늘의 세계의 사회운영체제는 공적영역(Public Sector)으로서의 정부, 민간영역(Private Sector)으로서의 기업 그리고 제3영역(The Third Sector)으로서의 시민사회의 3개 영역이 어울려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자율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이며 견제하는 가운데 균형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이들 3자간의 동반자관계(Partnership)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사회는 더불어 사는 정신이 깃든 공동체사회가 되는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공동체사회는 분권화된 지방자치체에서 보다 실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6.27 지자체 선거 이후 출범한

지방자치=시민자치의 개막은 지방화시대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 의미가 크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과연 시민사회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반성해 보는 것도 21세기를 대비하는 일의 중요과제가 된다.

1995년 1월에 발표된 우리 나라의 <세계화 구상>을 위한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는 새로운 가능성과 폭발적인 위험이 교차하는 전환기라고 하고 있다. 21세기는 인류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처럼 건전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높은 때는 없었다.

우리는 현재 백척간두에 선 경제, 정치, 사회, 환경문제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의 위기상황 극복은 물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문제도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경제계에게만 내맡길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들 말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II. 21세기의 삶의 질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해온 삶의 내용은 물량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의 삶은 쾌적한 환경과 공동체사회를 주축으로 하는 질의 문제가 관건이다. 세계는 지금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21세기를 향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으며 새로운 인류역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구 환경 보전>을 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89.8%와 전문가 95.3%(한국환경기술개발원 '96.3)가 오늘의 세계문제로 환경문제를 꼽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나라의 국정목표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두어야 한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환경문제의 1차적인 원인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오늘의 생산과 소비양식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인구증가, 도시화, 빈부의 문제 등이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지구환경에 대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며 파수꾼이다.

196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이룩한 우리를 지배해온 핵심가치는 '더 많이, 더빨리, 더편리하게'였다. 우리 나라는 1992년부터 20%의 세계인구가 80%의 세계자원을 소모하는 다소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물적, 양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을 계속하는 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존속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는 오늘날 환경친화적인 생활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과소비 자체 문제가 지구환경을 위한 생활양식의 제일 큰 덕목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로 미루어 과소비자제운동과 관련한 통상국들의 수입규제라는 반발에 대해 단지 민간단체의

운동으로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정당당당하게 환경친화적인 생활운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가해자로서는 과소비를 자제하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로서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공동체사회로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체들이 각기의 지역사회를 살맛 나는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틀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 21 - Agenda 21>에 의거한 <지방의제 21>이다. 이것은 필히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즉 지방정부,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 및 지역단체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행동계획에는 각 행위자의 실천의지가 담겨야 하고 그 실천지표는 행위자 각자가 설정해야 한다. 이 작업은 <환경자치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민자치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은 지역주민이 지역행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취된다. 종래에서처럼 주민이 행정의 수혜자 또는 통치 및 관리대상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방자치 개막과 더불어 민선자치단체장들이 행정(삶의 조건을 만드는 과정)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한 선언을 선언으로 그치게 해서 안된다. 이 책임은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에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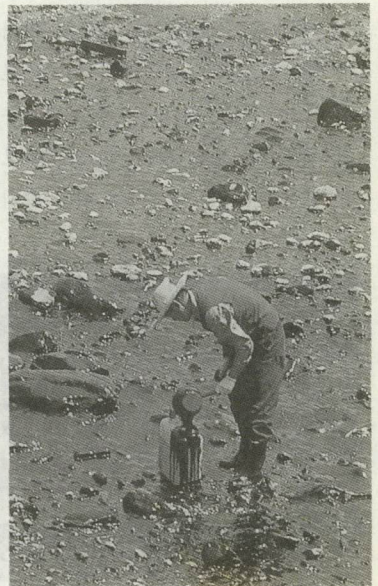
환경보전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은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일이다. 그 대상은 생산업체일 수도, 정부시책일 수도, 이웃이 될 수도 있다. 환경은 모두가 함께 지키는 것이다. 지구시민 모두는 누구나가 1인 3역의 역할을 해야 하며 그것을 제대로 해내게 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몫이다.

향후 우리의 삶의 질 향상 노력에 큰 변수로서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오늘의 북한의 현실과 남북통일 문제이다.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및 대비가 절실함을 지적해둔다.

Ⅲ. 오늘의 시민운동

오늘의 세계에서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반면 시민사회의 저해요인 또한 엄청나게 존재한다. 우리 나라의 시민운동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시민운동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현재 시민의 권리확보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모든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제한다.

최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과 관련한 문제로 경실련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일로 시민단체들은 제각각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체제외의 시민운동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유일한 대안은 건전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라고 식자들은 입을 모은다. 문제는 오늘의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시민운동이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권위(정당성과 신뢰성)와 힘(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3월 24일자 한국일보의 <시민단체의 자기 개혁>이라는 제하의 논설에서 보면 80년대 후반 기존사회운동의 명백한 한계 속에서 제도정치권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출발한 시민단체들은 90년대 초반 한 때 우리 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국가가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소수의견, 반대의견을 보완하는 장치로서의 시민단체들의 입지확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

서의 시민단체의 사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형상의 덩치는 커졌는지 모르지만 위상은 반대로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위상제고는 시민단체들의 자기개혁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우선 과제로서 ①대중성의 제고 ②내부문제(재정확보, 양질의 인력 충원 및 유지)의 해결 ③조직과 구성원의 도덕성 견지 ④민주적 운영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제들이다. 최근의 환경운동, 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유급 실무자에 의한 엘리트 중심의 운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데 있다. 그로 인해 운동체의 의사결정과 운동전개과정에서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다.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은 많은 수의 실무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에 따른 막대한 경상비 지출 문제로 운동의 순수성과 도덕성 유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시민운동이 아니라 자기 유지를 위한 하나의 사업체에 불과하다는 자성이 일어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의 시민운동 사회운동이 소수의 명망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그 소수 명망가들이 모든 시민운동을 대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운동이란 파급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일과성 행사로 이어지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시민운동에는 많은 시민이 가담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운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 과정을 거쳐 시민에 의한 시민의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민간단체의 신뢰성 문제가 심판의 자리에 오른 차제에 시민운동은 반성을 거쳐 자기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전 YMCA연맹 사무총장인 강문규 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시민운동의 체중을 줄이고 거품을 빼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한다. 시민운동의 저변확대, 도덕성, 신뢰성 확보, 회원에 의한 재정충당방안 마련, 전문인력확보 등으로 시민운동의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IV. 시민운동으로서의 YMCA의 과제

YMCA는 시민운동으로서만이 아닌 에큐메니컬운동, 청년운동, 회원의 운동, 발란티어운동, 지역사회운동, 국제운동 등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운동체이다.

오늘날 YMCA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대단한 것이다. 창설 이래 회원들과 지도자들이 축적한 업적, 공신력, 도덕성, 조직력, 지도력 그리고 영향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자산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바로 세우기



에 투입되어야 한다.

YMCA는 지금까지 소집단 활동(개미군단 형태의 저변조직)을 토대로 이루어진 시민운동으로서 시민의 민주훈련의 장의 기능을 다해오고 있다. YMCA는 바로 이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 시민운동을 시민운동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비롯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 ①생활양식개혁운동(다시쓰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 ②살맛 나는 내 고장 만들기 운동
 - ③지방행정 참여
 - ④공동체사회 회복운동(도농간, 계층간 등)
 - ⑤선거국면 바로 대처
 - ⑥통일국면 바로 대처
-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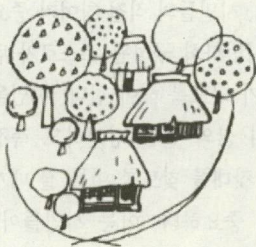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막강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YMCA가 기독교 정신으로 결단만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21세기의 삶의 향상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오늘의 현실에서 YMCA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 한국인으로서의 책임, 지구인으로서의 책임은 무엇인가? YMCA는 하느님의 부름에 응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

21세기 지역사회 만들기운동 : 삶의 질 지표 만들기운동

(시애틀 사례를 중심으로)

남부원 /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1. 삶의 질 지표 만들기의 의의

지금 우리사회는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국가주도 경제개발의 결과 파생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빈부의 격차와 상대적 빈곤감, 경쟁의 심화와 함께 파괴된 사회연대성, 사회적 소속감의 해체와 윤리적 토대의 붕괴, 위기적 상황에 치달은 환경오염과 생활환경의 악화, 청소년범죄와 일탈의 증가, 농촌의 황폐화 및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제반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개발주의의 깊은 후유증이 만연해있는 실정이다.

경제개발 지상주의가 지배하던 지난 30여년간 우리사회에서 이른바 '발전'을 측정하던 지표들, 이를테면 GNP, 주택보급율, 승용차보급율, 도시화율 등은 개발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둔 오늘날 이러한 개발시대의 지표들은 더 이상 시대적 적합성(Relevancy)을 갖지 못한다.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시민사회의 요구(need)가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식자들이 예측하는대로 곧 다가올 21세기는 환경주의, 문화주의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쾌적성(amenity)과 시민적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에 풍미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평가하는 잣대가 변화해야 하며, 새로운 지표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면 시민적 삶의 질은 무엇인가? 이의 구체화를 위해 삶의 질에 대한 스케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